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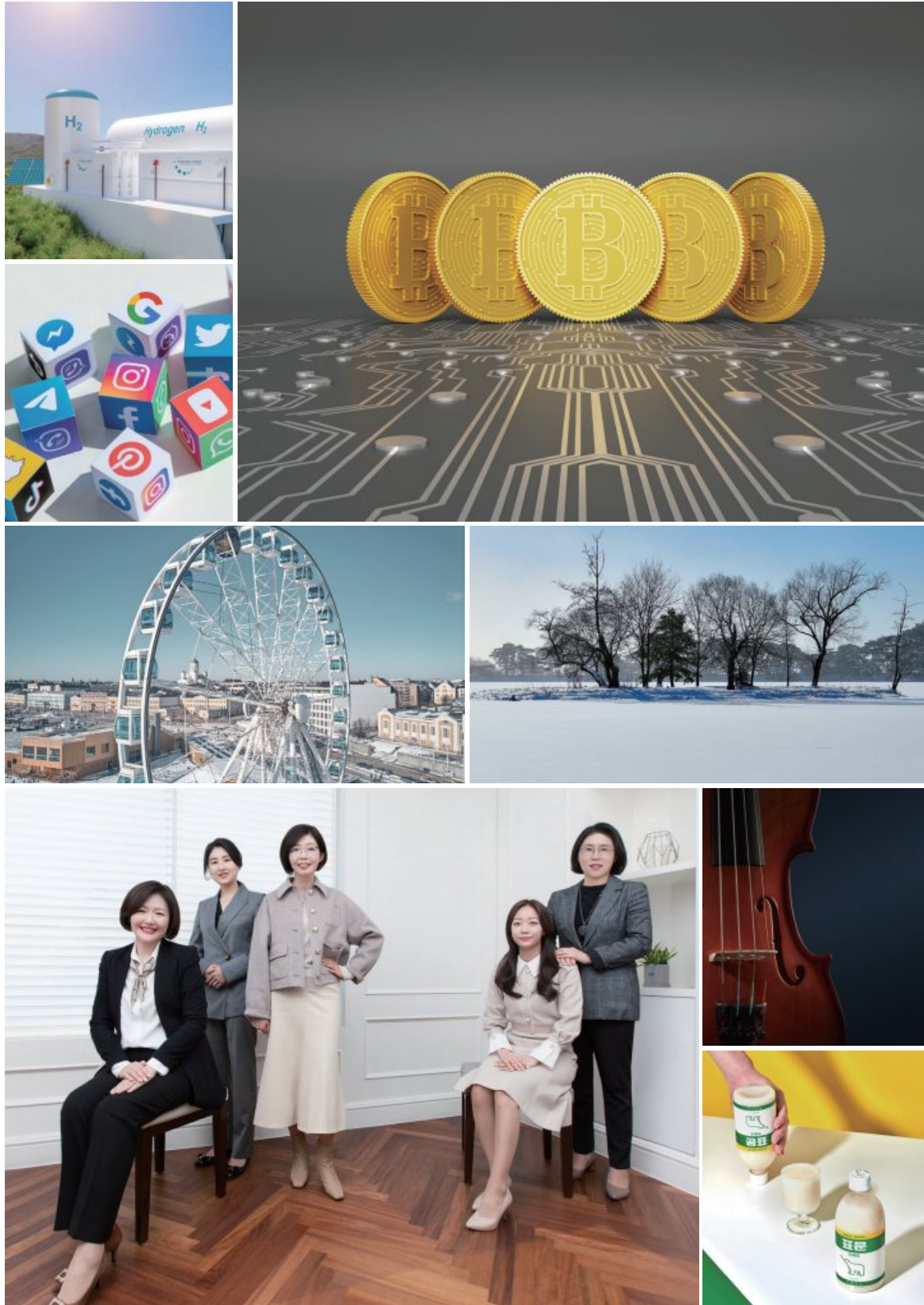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2536호 (2021.07.06) 게시기간 : 2022.07.05 출금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가맹점영업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통권역 위반사상이나 개성이 필요한 경우 신고제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kethics@ibk.co.kr





CONTENTS

2021 WINTER | VOL. 24

32

WM SPECIAL

오늘의 지성으로
내일의 방향을 안내하다
부산WM센터

36

THE LAW

2022년 부동산 세제(稅制) 전망대

40

TRAVEL AGAIN

겨울 정경이 소복소복 쌓여 있는
핀란드 헬싱키 VS 한국 제천

48

CLASSIC CLASS

새해의 희망을 연주하는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50

TOAST TO THE FLAVOR

온고지신의 술 막걸리

52

EPILOGUE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04

FOCUS ISSUE 1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소경제

10

FOCUS ISSUE 2

비트코인 ETF 출시
투자자산으로서 주목을 받다

16

GLOBAL REPORT 1

중국 전력난의 원인과 전망

20

GLOBAL REPORT 2

국제조세체계를 재정립하다
2023년에 도입되는
글로벌 디지털세

24

TAX GUIDE

세대생략증여·상속을 통한 절세 전략

26

INVESTMENT

2022년 1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온실가스, 수소경제 ...”, 2021년 환경과 관련하여 매스컴에 가장 많이 노출된 대표적인 키워드들이다. 올해 유독 환경분야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산업과 경제 등 인류의 문명 발전에 눈부신 성과를 보여준 화석연료 이면에는 기후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글.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소경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사회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 및 파리기후협약을 채택하며 기후변화에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이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다시 한 번 위기의식을 높였고,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실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불과 1~2년 사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 질서도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름잡던 석유메이저 엑슨모빌의 주가가 급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90%에 해당하는 나라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05개국



은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집중하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 서약하였다. 온실가스의 하나인 메탄가스 사용을 줄이고,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에도 많은 나라가 동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기업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중심의 ESG경영을 선언하며 탄소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용 구조로 변모하고 탄소중립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된 수소에너지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에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8월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우리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 최근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태양, 바람, 물 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로 큰 방향을 잡았으나,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갖는 제한적 입지(설치)조건, 불확실한 에너지 생산

환경, 간헐성 등이 한계로 대두되었다. 이에 과거 일부 산업용과 특정 분야의 에너지로만 사용이 국한되었던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보완과 환경문제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소는 다른 에너지와 달리 자연상태로 있지 않고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 다양한 원천에서 화합물로 존재한다. 화합물에서 수소를 생산해 이를 저장·운송하여 활용하면 청정에너지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기술집약적 에너지로서 연관 산업과 관련된 융합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히 높은 산업 공정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공정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

2017년 맥킨지는 2050년 세계 수소시장 규모를 2.5조 달러로 전망하였는데, 2020년 골드만삭스는 12조 달러로 예측하며 미래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밝게 보고 있다.

수소산업 주요 리더들로 구성된 세계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역시 지난 2월 발간한 '하이드로젠 인사이트 2021'에서 현재 약 30개 국가에서 수소로드맵을 발표하고, 228개의 대규모 수소프로젝트가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규모도 약 800억 달러로 2030년까지 약



3,00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의 ESG경영 선언도 수소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글로벌 공룡기업을 시작으로 국내외 제조기업, 금융, 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야만 투자유치, 수출 등이 가능하다는 글로벌 시장 흐름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

높은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나름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퍼스트 무버'를 목표로,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6대 세부분야별 정책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였다. 이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까지 마련하였다.

또한, 원천기술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도 올해는 2019년 대비 3배 증가한 2,40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범도시, 클러스터, 규제특구 지정과 33건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월 기준 수소전기차는 18천 대 넘게 보급되고, 수소충전소 118기, 발전용 연료전지 710MW 가동 등 활용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기술은 일본 도요타를 능가할 정도로 성숙해 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소충전소 부품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전



지도 세계 최대 시장을 형성하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 10월 7일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 국가 비전-민관합동 보고대회」에서 청정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동시 구축을 목표로한다고 선언했다. 수소차의 내구성 향상 및 가격 인하, 열차, 선박, 건설기계 등 모빌리티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공정 체계로 전환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밝혔다. 또, 생산 분야에서는 수전해,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수소 수요를 충당할 해외수소 도입과 충전소, 배관

망 등 빈틈없는 유통 인프라망도 구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계의 협력

국내 산업계도 조직 내 수소전담반 신설,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사업화 추진, 기존 에너지 사업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총 43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에는 그룹사별 수소 관련 사업 투자 확대와 수소사회 구현을 위하여 총 15개사가 참여한 ‘수소기업협의회’(Korea H₂ Business Summit)도 출범하였다.

국내외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수소액화, 운송,

CCUS, 수소 모빌리티·발전 확대 등 수소경제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연관 투자, 공동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실증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협력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치사슬 전후방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으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업과도 상생협력구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 공정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산업계가 갖는 부담감과 위험요소도 함께 대처해 갈 수 있다.

국내 금융계도 보증, 펀드, 컨설팅, 수출금융 등의 투자 및 지원 상품을 속속 출시하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를 지원 사격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완전 도입하기까지 약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소산업에도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없던 기술과 산업, 인프라, 정책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재 탄소에너지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달성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수소경제가 확립되기 위한 사업적 측면에서의 핵심은 하루빨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수소경제가 산업 목적을 넘어 국가

●
국내 산업계도 조직 내 수소전담반 신설,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사업화 추진, 기존 에너지 사업의 친환경 구조로의 전환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진흥, 안전, 투자 등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제도지원 등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산업계는 사업 모델의 개발과 실질적인 투자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계도 국내 수소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안을 갖고 금융·투자 지원의 창의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경제 기반을 단기간에 조성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대표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월 초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모빌리티 전시회는 한국이 수소경제의 테스트베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수소 선도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일관성을 갖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면, 수소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다.

미국증권시장에 출시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ETF 출시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글. 이태용 웨이브릿지 CGSO
(글로벌전략총괄)

비트코인 ETF 출시 투자자산으로서 주목을 받다



미국증권시장에 출시된 비트코인 ETF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다. 캐나다와 유럽의 증권 거래소들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 ETF, ETP 들이 거래되고 있었지만 미국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히 미국의 주식, ETF 들을 많이 거래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 투자에 앞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자산가

격의 상승 또는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이며,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선물 계약은 일정 기간 후 만기가 도래하면 다음 만기로 교체해야 하는데(rollover·롤오버) 이에 따른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도 있다. 즉 만기가 도래한 선물을 매도하고 다음 만기의 선물계약을 매수할 때 매수가격이 매도가격보다 높을 경우 해당 롤오버 거래는 비용, 즉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콘탱고(Contango)라고

하며 선물계약을 기초로 하는 원유 등의 ETF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잠재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감독기관인 SEC로부터 감독, 관리를 받는 ETF라는 투자상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의의가 상당하다.

비트코인 투자가 수월해진 한국의 투자자들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투자상품, 방법 역시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거나 또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상품 즉, ETF를 매매할 수 있다. 모두 나름의 고려사항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24시간 거래 가능하지만 전통시장 대비 자산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ETF와 같은 전통 증권 거래소 상장상품은 접근성과 안정성 등이 탁월하지만 간접 투자 형태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ETF 운용 수수료, ETF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 간 괴리 등).

한국 투자자들(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은 미국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주식과 ETF 들을 거래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ETF로 미국증권시장에서 출시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개인투자자들도 자신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미국의 주식과 ETF 들을 거래하는 것처럼 매매, 보관 등에서 특별한 이슈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산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받으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나 투자해야 할까? 물론 정해진 답은 없다.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은 짧은 시간에 변동 폭이 너무 커질 수 있어 감당하기 힘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투자를 결정할 경우, 분산투자, 장기투자라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 전체 투자 중 5~10% 정도를 적정치로 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에 투자를 하든 그 투자자산 가치의 변동이 심할 때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그다지 잘하고 있는 투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자산이 다른 종류의 자산들과(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금 등)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움직이는지(correlation) 아직은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흔히 금을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헷지(Hedge·대비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금과 자주 비교되며 ‘디지털 골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리 상승세가 시작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여러 의견이 있으나, 필자는 비트코인이 가진 희소성이 그 가치를 상승시켜 가리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의 희소

성은 그 유통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약 1,875만 개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원칙하에 결정되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대하는 한 가격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분산투자가 가능해진 가상자산

필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시장의 ETF들을 활용하는 글로벌 투자와 함께 필요한 것은 장기투자(10년 이상), 분산투자(다양한 자산 종류에 분산), 지속 투자(매월 수만 원, 수십만 원 추가 투자)이다.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된다.

투자자산과 투자방법은 진화를 거듭해 왔다. 오랜 기간 많은 전문가와 석학들은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해답을 찾자 노력해 왔다. 다양한 투자자산을 연구하고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용해 보는 수많은 시도 끝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투자의 원칙이 상당 부분 검증되고 확립되었다. 그 중 하나가 분산투자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ETF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ETF로 출시됨으로써 이 또한 적극 활용될 것이라 믿는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의 ETF들과 같이 가상자산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의 투자가치

비트코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2008년 10월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비트코인 백서(whitepaper)'가 발표되었고 직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출범함으로써 세상에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백서에서 제안한 대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약 1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약 2.9 trillion US dollars로, 약 3천 4백 20조 원 정도의 규모이다 (CoinMarketCap, 2021년 11월 12일자 기준).

이렇게 폭발적인 시장가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명망 있는 경제, 금융의 석학들, 전문가들 중에도 가상자산은 버블이고 심지어는 '실체가 없으므로 결국은 0의 가치가 될 것'이라는 독설로 일관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전통 금융시장에서 명성과 업적을 이룬 여러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옮겨와 젊은 세대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 가는 추세도 뚜렷하다. 이들은 기존의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금 등과 동일한 이치로, 가상자산, 블록체인의 효용과 가능성을 믿으며 나아가 투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산 종류가 될 것이라 믿는다.

상호보완성이 구현된 비트코인 ETF

앞서 언급한 대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새롭게 등장한 투자자산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가상자산을 대하는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행위 금지를 선언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방은행 총재와 SEC 의장이 나서 가상자산을 금지할 의도가 없다고 선언하며 중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자 개인 의견으로는 가상자산의 화폐, 지불 기능이 지나치게 조명을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이들 각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의 감독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고 해당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다. '탈중앙화'를 기치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한 독

립을 지향하며 태동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참가자와 투자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이다. 다만 상반되는 양측의 시각과 접근에서도 상호보완의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비트코인 ETF는 전통금융시스템과 가상자산의 상호보완성이 잘 구현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항상 새로운 것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도전과 기회가 함께 주어지듯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그리고 관련 테크놀로지가 지금껏 가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GLOBAL REPORT 1

중국 전력난의 원인과 전망

세계 이슈를 선점했던 중국 전력난. 최근 중국이 6중 전회에서 전력난 해소를 선포하였지만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촉발한 문제인 만큼 그 원인을 살살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이때, 어제의 경험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

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중국 전력난, 기후변화 이슈 선점을 위한 정책적 요인

전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때 주요 제조업 기지 공장에 대한 제한 송전을 실시하고 급기야 민간 분야까지 전력난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민심 수습과 국가 대응 능력과 시를 위해 11월 7일 에너지 공급을 관장하는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公司)를 통해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음을 알렸다. 여전히 석탄에 60%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 전력발전의 구조적 요인으로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코 단기간 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최악의 상태로 확산되는 것은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전력난은 일부 예견된 것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복합적 요소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전력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작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적 기후변화 이슈 선점을 위해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부터 감소시켜 206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 제한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석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고, 중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는 각 화력발전소가 발전량을 감소시키자 전력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력발전 규제와 호주와의 외교적 갈등 등 복합적 요인

화력발전을 규제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도 한몫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각국 정부가 확장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펴자 중국산 제품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고, 제조업이 빠른 성장과 회복을 보이면서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33%나 늘어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부터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최적화와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를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며 매년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을 3% 줄이라는 정량화된 에너지 생산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렇게 되자 석탄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에 몰린 화력발전소는 자연스럽게 전력 생산을 감소시켰다.

또한 중국이 호주와의 외교적 갈등을 호주산 석탄 수입 중지라는 '경제 보복'으로 풀려고 한 조치도 전력난의 한 요인이 되었다. 중국 전체 석탄 수입량으로는 2%에 불과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전용 석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고품위 석탄 수입 중지는 갑자기 대체 수입선을 찾을 기회도 없이 바로 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 발전의 약 20% 정도를 분담하는 수력발전도 서부 지역의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서부 내륙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인구가 많은 동쪽으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프로젝트에 타격을 입었고, 탄광지역에서는 오히려 홍수가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채굴에 난항을 겪으면서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을 부채질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관점도 있다. 일단 미중 갈등 증폭 상황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계기로 방만하게 운영됐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재정비해 탄소중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 분야를 한 단계 더 육성시키려는 충격 요법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최우선 국정 기조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강력한 기후변화 이슈 선점이라는 정책적 이슈와 호주와의 외교적 분쟁이 석탄 수입 금지라는 대안 없는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발전에 필요한 강우량 부족이나 탄광 지대의 폭우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어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국 제조업 특수가 겹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여전히 과거 수준으로 통제하려 했던 중국 정부의 합작품 성격이 강하다.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유예하다

결국 중국은 석탄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전체 중국 제조업의 40%를 차지하는 생산기지인 광둥(廣東)성,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랴오닝(遼寧)성 등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의 제한 송전은 중국의 국가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고, 민간 분야까지 전력난이 확대되면서 사회 불안까지 조성되자 에너지 소비 통제보다 민생 안정과 경기 급랭이나 둔화 방지에 다시 초점을 맞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겨울

을 앞두고 민생과 직결되는 난방 수요를 담보하고, 급박한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당분간 석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기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던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것에는 매우 중국적인 배경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탄소중립 의지에 대한 후퇴가 우려된다. 중국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후변화 특별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COP26에서 40여 개국이 참여한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에 불참하였다. 물론 중국의 탄소중립이라는 국정 목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1월 15일 열린 미중 화상 정상 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생’을 이유로 실질적 탄소배출 저감에 유예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올해 겪은 전력난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력난 해소, 중국의 정치적 수단

정치적 이유도 있다. 지난 11월 11일, 중국공산당은 19기 6중 전회(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제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0년에 걸친 공산당의 역사를 재규정하고, 새로운 시대(新時代)에 진입했음을 선포해 시진핑 현 총

서기의 3연임이나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평가되는 ‘역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회의 하루 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전력 제한 공급 완화를 결정하고, 전력난 해소를 선포한 것은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다.

중국은 일단 전력난 해소를 위해 기록적인 석탄 수입과 생산량 증가를 시도했다. 급기야는 북한산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10월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전력을 수입했다. 또한 자국 내 천연가스 채굴 확대는 물론이고, 미국과 향후 20년간 매년 40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친환경 탄소 절감 정책 추진에도 유리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대를 통해 작년 1월 맺은 미중 1차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측의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력난 타격의 경험,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전력난은 전 세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만일 중국 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차질이 생긴다면 세계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은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대표되는 중국은 원자재 수입이 많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민감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세계 경제에도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망 차질 현상 장기화는 중국의 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석탄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수 같은 단순 제품의 과급력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더욱 신경이 쓰인다.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중국은 여전히 2060년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에게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전 세계 50%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를 갖춘 국가다.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90%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향후 15년간 최소 15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하고,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 등 녹색 에너지 기술 제조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통해 전력난을 겪은 적이 있는 우리로서는 유의해야 할 대목인 셈이다.

한국은 중국 공급망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은 친환경 산업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원자재 수급은 물론 에너지·철강·석유화학이나 자동차·반도체·IT 산업 등 한국 주력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중국발 원자재 공급난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GLOBAL REPORT 2

국제조세체계를 재정립하다 2023년에 도입되는 글로벌 디지털세

2023년부터 글로벌 디지털세가 발효된다. 국제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하는 역사적 성과라는 의미와 장기적인 세수 확보의 효과가 있으나,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찾아올 변화를 미리 살펴볼 때이다.

글: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글로벌 디지털세의 도입

10월 말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조세개혁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은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법인세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에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 표준규칙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조세제도와 기업환경이 크게 바뀌게 되므로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된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

도입 배경,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의 BEPS로 인한 법인세 손실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

면서 기업활동에서 법인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과 이에 대한 과세권을 지닌 관할국의 연계가 모호해졌다. 특히 구글과 같은 디지털 공룡기업에 대한 과세문제가 BEPS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OECD/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6년 포괄적 이행 체계(IF·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켰다. 13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IF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디지털세 논의와 별개로 2018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추진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세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경제 재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합의 내용,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7월 1일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130개국이 합의했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글로벌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 중 이익률(글로벌 세전이익/글로벌 매출액)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굴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1에는 적용 대상 기업과 배분량뿐만 아니라 과세 연계점(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 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매출 귀속 기준, 이중과세 제거, 분쟁해결 절차, 일방주의적 조치, 이행 계획의 구체화 등도 포

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국가별 단독과세 폐지를 의무화하였다. 필라2는 글로벌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1조 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이 10%인 국가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은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둔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 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급효과,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과세권 확보
이번 합의는 국제조세체계의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

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곳, 전 세계적으로는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1,250억 달러(약 147조 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재분배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중과세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국은 달라지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에 납부하던 세금 중 4,000억 원 가까이를 해외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구글 등 그동안 국내에 세금납부 실적이 미미했던 외국기업들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곳 정도이나, 2030년부터 연결 매출액 규모를 100억 유로로 낮출 경우 대상 기업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주장 때문에 적용 대상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 재점검 필요성
최저한세율(15%) 적용을 받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7,000~8,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는 1,500억 달러(약 176조 원)로 늘어날 것이라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최고 법인세율이 25%이기 때문에 최저한세율 15%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율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이외의 제도와 규제 요소가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관련 제도를 면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비해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디지털 글로벌기업들의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실태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법적 걸림돌을 해결해야만 한다.



세대생략증여·상속을 통한 절세 전략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기 때문에 두 번 발생할 증여세가 한 번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세대생략상속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세대생략증여·상속의 이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주의점도 함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글.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세대생략증여

일반적인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2대에 걸쳐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

세대생략증여는 세대에 걸쳐 각각 증여세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하여 절세 효과가 크며, 향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절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사전증여 상속재산 합산 기간은 10년이다. 다시 말해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만 해당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세대생략증여는 10년이 아닌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이점이 있어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세대생략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할증과세라는 단점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유의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 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증여와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총 3억 8,25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총 2억 9,25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함에 따라 9,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대생략증여와 세대생략상속의 차이

세대생략증여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를 세대생략상속이라고 하며, 세대생략상속은 ①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②생전에 피상속인이 자녀 대신 손자·손녀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세대생략증여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유증 없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를 넘어 손자·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됨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생략상속은 세대생략증여와 마찬가지로 2세대에 걸친 일반 상속에 비하여 절세 효과가 존재하나, 상속공제한도 감소에 따른 불이익이 존재할 경우 일반 상속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전에 피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 대신 손자·손녀에게 상속재산 15억 원을 유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세대생략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총 4억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지만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는 총 5억 7,2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함에 따라 오히려 약 9,200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할증과세 및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미리 상속을 대비한다면 적절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핵심을 정리하면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만 일반 증여 대비 절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합산 기간도 5년으로 준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세대생략상속은 할증과세 외에도 상속공제한도가 감소되는 효과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

2022년 1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은 2022년 1/4분기에도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4/4분기 주식시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를 품는 심리도 있겠지만 2022년 초 역시 상승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가 하락 압력과 높아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글: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정책 정상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은 2022년 1/4분기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4/4분기 주식시장 부진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2022년에는 상승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높아진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는 유동성 여건이 정상화 쪽으로 가속되고 있고 경제환경이 변곡점을 지나 점차 둔화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환경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은행 인상과 연준의 테이퍼링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제자리로 돌리는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낮은 금리 부담과 넓어진 자금 조달 통로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켰으나 금리 인상은 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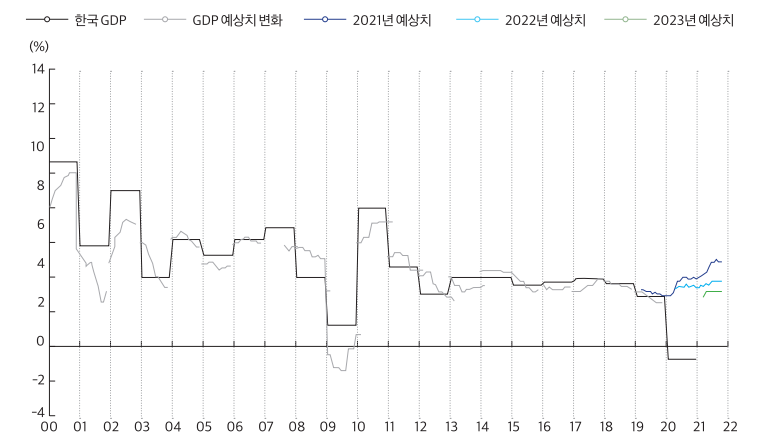
을 증가시키고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는 자금 조달 통로를 좁히고 있어 점점 투자자들의 운신 폭을 좁힌다.

또 다른 이유는 경기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불안이다. 2021년 2분기 말과 3분기 초 등장하기 시작한 우려는 경제 지표로 뒷받침된다. 기업의 체감 지표들은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2021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둔화되고 소비자 기대지수도 여름을 고비로 하락하였다. 심리 지표들의 뚜렷한 반락은 생산이나 투자와 같은 실물 지표들에 대한 하락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일상 회복이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부 업종에 국한될 뿐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돌려 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2년 성장을 전망에는 치료제 보급과 조금 더 진전된 일상 회복이 전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망 수치가 둔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었던 저금리와 여러 자금 조달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종료되며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하반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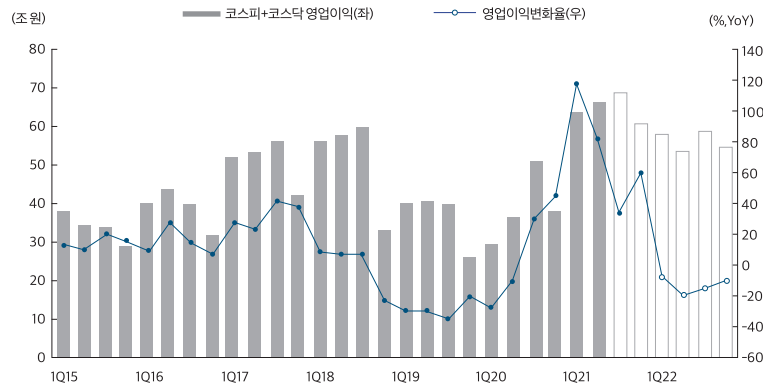
이런 정책 정상화를 반영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에 대한 예측기관들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한다. 2021년 4분기 금융시장 부진은 테이퍼링이나 중국 문제 등의 요인이 있지만, 투자자들이 2022년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 전망한 결과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2021년과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흐름 주: 전망은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한국 주식시장 기업 영업이익의 추이와 전망

주 : Fn-guide, IBK투자증권



기업실적 불확실성 증가, 인내심과 기회를 넓히는 다양화가 필요한 국면

투자환경이 불안한 세 번째 이유는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 여건과 경제환경의 변화 전망은 당연히 기업실적 전망에 반영된다. 금리가 오르고 여러가지 자금 조달 통로가 닫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나타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류비용 상승 등 다른 비용 상승 요인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주요국 성장률의 둔화나 우리나라 소비자 기대지수의 하락 등은 수출과 소비 둔화를 통해 기업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를 반영해 기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2021년 2분기와 3분기를 고점으로 2021년 4분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투자환경이 불안하고 번곡점을 돌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투자의 성공확률이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세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자세가 더 유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전처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싼 주식이 거의 없고 투자 기회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회를 남발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인내심

이 필요한 이유다. 투자자산의 선택에 있어서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도주를 쫓아가는 직선적인 투자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익률을 방어하고 기회를 넓히는 다양화가 필요한 국면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2022년 채권시장,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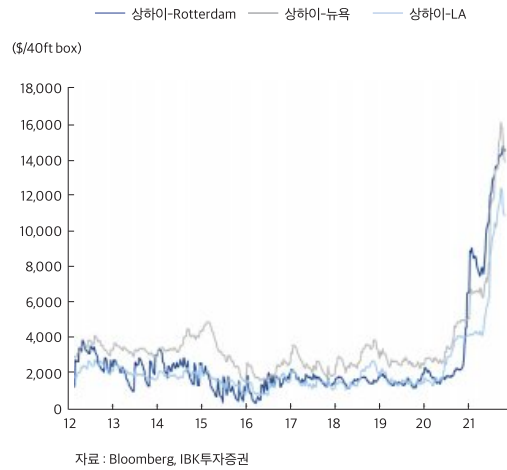
사람들은 흔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한다. 금융시장은 투자자들의 감정의 복합체이므로 새로운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지만, 과거와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내 안정을 되찾게 된다.

2022년의 화두는 코로나19 위기 직후 도래한 '인플레이션'과 '긴축'이다. 이례 없는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경제/사회적 현상과 그 과정에서 진행된 많은 정책들은 지난 2년간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2022년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원년으로서, 금융시장은 새로운 듯 새롭지 않은 경험들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금융시장을 당황하게 만들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공공이 생각해 보면 이미 겪었던 일들(인플레이션, 긴축)이 오랜만에 찾아왔을 뿐이다. 우리는 2022년이 채권투자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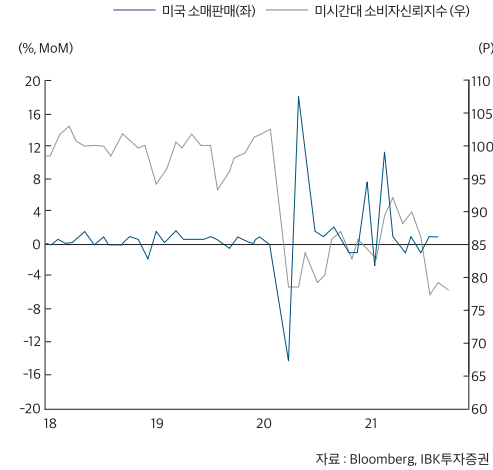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은 항상 중요한 주제다. 코로나19 전에는 물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을까 봐 걱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은 공급망 병목 현상에서 촉발되었다. 공급망 차질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기존 불경기를 반영해 줄어들었던 공급(재고)과 원활하지 못한 제품 운송이 향후 경기 회복기대로 인해 늘어난 수요에 못 미치면서 발생하는 괴리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운송 비용 및 생산자물가 등이 상승하게 되고, 본 상황이 장기화되면 소비자물가로 가격 부담이 전가되어 내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전염병 특성상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면서 각종 항공 및 해운 등 운송시스템이 축소됐고, 주요 인력의 교육이나 연수 등이 취소되어 운송 관련 인력도 대거 부족해지면서 공급망 차질이 가속화됐다. 실제 운송 관련 비용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4분기 글로벌 금리 급등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도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촉발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는 공포로 연결되면서 금리 급등이 전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2022년도 2021년 후반부와 마

2021년 10월, 주요 운송비용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



미국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 간 괴리



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어지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도래할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슈와 금리 상승이 내년 1분기경 대체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송비용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운송 수단이 많아지고, 인력이 늘어나면 운송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최근 상하이를 기준으로 로테르담과 뉴욕, LA 등 주요 지역으로 운송하는 운임비용은 2021년 10월을 고점으로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선박 발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1년 치를 상회해 이미 공급망 차질에 서서히 대비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선박은 글로벌 제품 운송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두 번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2022년 내내 계속될지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경기는 긍정적이겠지만 고점을 지나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장인 중국의 각종 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미국의 체감경기는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소매판매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향

후 소비를 점치는 소비자심리는 장기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한국 역시 수출 등 각종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업황은 부정적이다. 현재를 나타내는 실물 지표는 좋지만, 미래를 대변하는 심리 지표는 부진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심리 지표가 실물 지표에 비해 대략 6개월 선행한다는 점에서 2022년 1분기경부터 실물 지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워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구글 이동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외부 활동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상태이다. 특히 소매업 및 여가시설과 관련된 활동은 2020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에 비교해 뚜렷하게 회복된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개선의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은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다. 11월 연준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2022년은 긴축이 시작되는 해다. 미국이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으나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인상과 유로존, 영국 등 선진국의 긴축 전환 시그널은 필연적으로 경기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금리는 경제 비용을 대변하므로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 내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불가하다. 더군다나 금리는 일정 수준 상승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게 되면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순환적 구조에 놓인다.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 후반부에 시행되는 긴축은 초반에는 금리에 상승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전환된다.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지금은 2022년 채권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두 요인이 채권시장에 비우호적인 것은 맞으나, 금융시장이 처음 겪는 현상들은 아니다. 물론 무섭고 새롭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미 익숙한 초행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022년이 채권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앞서 기술했듯이 두려움을 촉발하는 각종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시그널이 발견되고 있고, 수요가 마냥 증가하기에는 선행 지표들이 썩 좋지 않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긴축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라면, 2022년은 위험자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해일 수 있다. 강해지는 글로벌 긴축으로 경기에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캐리를 얻고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을 기대하며 채권을 저렴하게 담기에 매우 적절하다.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언제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내일을 읽고 다음을 대비하는 부산WM센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 누구도 아닌 고객을 위한 일이라고 당차게 말한다.

글. 임산하 사진. 한유리

오늘의 지성으로 내일의 방향을 안내하다

부산WM센터



(왼쪽부터) 김경연 부센터장, 박은미 팀장, 이민경 대리, 김원애 센터장, 김소영 PB팀장



고객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다

부산WM센터는 2018년에 개점한 풋풋한 센터이지만 실력과 기량에서만큼은 단단한 힘이 돋보이는 곳이다.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무장한 김원애 센터장과 그를 믿고 단합하는 네 명의 직원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WM센터는 날마다 급변하는 자산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데, 매주 월요일의 정기적인 토론 외에도 그날그날의 전략 상품이나 글로벌 이슈 등을 살피는 자리는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잊지 않는 부산WM센터. 직원들이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고객을 위한 긍정의 욕심 때문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건설적인 상담이 고객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들이다.

탄탄한 바탕 위에 다져진 기반

견고한 기반은 아무 데서나 쌓이지 않는다. 탄탄한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부산WM센터 직원들의 '바탕'은 형형색색으로 빛난다. PBA로서 꼼꼼한 업무 처리와 친절하고 고객 응대를 보여 주는 이민경 대리, 외환전문역으로 개인대출에서 기업대출까지 꼭 잡고 있는 박은미 팀장, 차분한 자세로 고객과 센터를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김소영 PB팀장, 그리고 무게 잡지 않지만 무게감이 있는 모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



는 김경연 부센터장까지. 각양각색의 장점은 김원애 센터장의 지도를 거쳐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낸다. 김원애 센터장은 스스로 욕심이 많은 센터장이라고 말하지만 직원들은 그의 내공을 동료로서 믿고 신뢰한다.

오늘도 뜨겁게 빛나는 그들의 열정

부산WM센터가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명확한 안내다. “저희의 종합적인 자산관리에는 리스크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원애 센터장에게서 당연한 자긍심이 엿보인다. 게다가 부산WM센터는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동시에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고객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부산WM센터. 이는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MGM마케팅’의 성과로 드러난다. 특히 부산WM센터는 영업점에 발송하는 투자상품 제안서에 자체적으로 선택한 상품과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현장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고객, 그리고 영업점과 상생하며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부산WM센터. 정확한 표지판이자 안전한 가로등이 되어 주는 그들의 열정은 오늘도 뜨겁게 빛난다.



2022년 부동산 세제(稅制) 전망대

물론 이른 감은 있다. 정부(안)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 세제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
여야를 비롯한 각 당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강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입에 눈과 귀가 쏠린다.

글
김중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변동은 상당수 국민을 소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다. 스무여 차례가 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 1966년 3월 국세청 개청 이듬해인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어느 시기에는 잠잠했다가 다시 도지는 고질병처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달고 산 지 55년이 넘는 셈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세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양도소득세는 국민적 관심사다. 집을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과 관련

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세제에 관한 내용과 내년도 세법 개정안 그리고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전예약 없이 이루어지는 여행은 불안하다. 이들에게는 입석이 주어진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대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설령 중간에 잠시 빈자리가 생겨도 금세 쫓겨날 수 있다. 세법 동향을 미리 챙겨 보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좌석 여행을 위한 사전예약 정도의 수고로움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에도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세법 규정

① 변화한 세율 규정

세율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주자(개인)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세율(통상 ‘기본세율’이라고 함.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55①의 세율 적용)이 조정되었다. 기존 6~42% 7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최고 45%(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구간을 신설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했다. 개정 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각각 가산했으나,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로 인상했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주택자는 최대 71.5%, 3주택 이상자는 8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6월부터는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바꾸었다.

또한, 2년 미만 단기양도 주택에 대한 세율을 1년 미만이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했다. 그리고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은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기존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한해 보유기간 불문 50%).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법인세율에 10%p 가산하던 것을 20%p 가산으로 인상했다.

② 거주기간 요건의 추가

3년 이상 보유 토지 및 건물(주택 포함) 등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소득)공제 조항은 조세 정책적 목적이 뒤따른다. 헌법재판소(2010.3.31.결정 헌법재판소2009헌가22외)에 따르면 동 조항의 취지를 부동산의 장기보유로 투기억제 효과와 물가상승 등 명목소득 배제 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봤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더 엄격히 한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거주요건 강화가 되며 주택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었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는 기존 0.5~2.7% 6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2배 수준)하였으며, 법인도 2주택(조정지역 내 2주택은 제외) 이하는 3.0%, 3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2주택)은 6.0%의 중과세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공제율을 상향(10~30% → 20~40%)하고 합산공제 한도도 인상(최대 70% → 80%)하는 등 사회적 보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나왔다. 또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6억 원 상당)가 있었으나 이를 폐지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9억 원 상당액 공제액을 11억 원 상당액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2년 부동산 세법 주요 개정(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자 간주임대료 과세와 관련하여 소형주택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던 특례규정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상가건물 장기(5년 초과 임대) 임대사업자(임대수입 75백만 원 이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5% 감면에 대한 적용을 종료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을 포함한다는 개정안도 나왔다. 실질이 공공주택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정부(안) 외에 의원입법(안)으로 국회 계류 중인 사안도 있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은 낮게 적용)하자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연초 LH투기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상향(기본세율에 가산 10%p → 20%p)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관련 공약

여당 후보의 경우는 실거주 부동산은 최대한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 같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종합부



동산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체계에 큰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부동산전담 기구 설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부담 완충장치로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야당 후보의 경우는 여당 후보와는 달리 세금부담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50%)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기존의 틀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기다리는 것을 권하고 싶다. 이왕이면 새 정부 출범 시점까지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경과 전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지점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MZ세대가 ‘영끌’로 집을 산다고 한다. 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21세기 우주여행의 시대에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집포자’로 남아 집시처럼 방황하게 할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는 대선 후보 간에도 한 치의 이견이 없다. 내년 대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겨울 정경이

소복소복
쌓여 있는

핀란드 헬싱키

V

S

다소곳이 우리를 맞이하는 핀란드의 헬싱키와 한국의 제천. 내세우지 않지만 다양한 매력으로 가득한 두 곳은 단연 외유내강의 여행지라 할 만하다. 특히 겨울철에 그 매력은 마력이 된다.

글. 임산하

한국 제천

긴긴밤의 매력이 가득한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는 밤새 내린 눈과 닮았다. 유난스러움 없이 차분하고 소박하다. 그래서인지 헬싱키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헬싱키에는 내세우지 않는 이에게 자연히 드러나는 단단함이 있다. 조용히 새하얀 기쁨을 선물하는 내면의 웅장함이 바로 헬싱키의 매력이다.

헬싱키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곳곳을 가볍게 거닐 수 있다. 걷는 게 힘이 들 때에는 녹색 트램을 이용한 이동도 가능하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다니는 트램 안에서는 헬싱키의 단정한 건물들을 여유 있게 구경할 수 있다. 게다가 겨울의 헬싱키는 건물과 도로마다 주광색 조명이 수놓여 있어 밤의 거리는 더욱 따뜻하게 빛난다. 북유럽의 특성상 낮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쯤으로 매우 짧으나, 낮보다 밝고 아름다운 밤이 있기에 결코 낮이 그립거나 아쉽지 않다.

길고 긴 밤은 연말 헬싱키 대성당(Helsingin Tuomiokirkko) 앞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전통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연말에 따뜻하게 마시는 와인 글로기(Glögi) 등을 판매하는 식당 등이 오두막 형태의 팝업 스토어로 열리는 이곳에서는 한껏 크리스마스에 빠져들 수 있다. 게다가 중앙에서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화려한 회전 목마는 마치 트리 위의 별처럼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점정이 된다.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자리

크리스마스 마켓의 배경이 되어 주는 헬싱키 대성당은 헬싱키 여행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관광지다. 여행객들의 인증샷 장소이자 헬싱키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이곳은 1852년 완공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대성당이었으나 핀란드 독립 이후 루터교회의 대성당이 되었다. 핀란드는 인구의 약 85%가 루터교로, 헬싱키 대성당은 핀란드 국민에게 특별한 곳이다.

헬싱키 대성당은 돔 형태의 지붕이 인상적인데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솟아 있지 않은 둥그런 모습은 온화하면서도 강인해 보인다. 웬지 우리를 따뜻이 감싸 줄 것만 같다. 실제로 헬싱키 대성당은 1년 365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헬싱키 대성당에서 핀란드 만이 있는 바다 쪽으로 걸어 나오면 또 다른 대성당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우스펜스키 대성당(Uspenski Katedraali)이다. 우스펜스키 대성당은 1868년 지어진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이다. 붉은 벽돌로 정교하게 지어진 이 건물은 비록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고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과거 앞에 물러서지 않으려는 핀란드 국민들의 굳센 의지 또한 엿보인다.



헬싱키 거리의 녹색 트램



크리스마스 마켓

거리마다 내려앉은 노을빛

빽빽한 마천루가 없어 어디서든 광활한 하늘을 마주할 수 있는 헬싱키. 헬싱키는 핀란드 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시원하게 트인 바다도 만날 수 있는데, 스카이휠(SkyWheel) 대관람차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대관람차가 40m 높이에 이르면 헬싱키가 간직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가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눈에 담긴다.

스카이휠에서 헬싱키 전경을 감상할 수 있듯 헬싱키 거리에서도 스카이휠을 만날 수 있다. 소박한 건물들 사이로 머리를 빼꼼 내민 스카이휠이 보이면 마음이 동심으로 물드는 기분이 든다. 이는 헬싱키가 우리 마음에 뿌리는 조용한 마법이다.

스카이휠에서 내려오면 바다를 마주한 수영장인 알라스 씨 풀(Allas Sea Pool)을 만나게 된다. 알라스 씨 풀에는 온수풀이 마련 돼 있어 겨울철에도 따뜻한 수영을 즐길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바다 위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이곳의 매력이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면 더 아름다운 환상에 젖게 된다. 거리마다 한 움큼씩 내려앉은 눈과 잔잔한 바다 물결 위에 노을빛이 퍼지고 눈앞에 한가득 석양이 깔리는 이때, 당신은 헬싱키가 선사하는 풍경에 푹 빠지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헬싱키의 겨울은 잔잔히 우리 마음에 들어찬다.



스카이휠 대관람차

●
 소박한 건물들 사이로
 머리를 빼꼼 내민
 스카이휠이 보이면
 마음이 동심으로
 물드는 기분이 든다.
 이는 헬싱키가
 우리 마음에 뿌리는
 조용한 마법이다.

TIP 여행 하면 음식이 빠질 수 없다. 헬싱키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는 시나몬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 안은 향긋한 계피향으로 가득찰 것이다.



●
 눈은 의림지 위에 소복이
 쌓이기보다는 잠시 머물다 간다.
 그래서인지 조금 쓸쓸하지만
 그 때문에 수수하게 빛난다.

눈 내린 의림지

자연의 수수함으로 빛나는 제천

제천은 조용하다. 아름다운 자연과 유수의 문화재가 가득하지만 전혀 내세움이 없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제천과 가장 닮은 여행지가 있다면 그곳은 단연 의림지일 것이다. 의림지는 그 역사가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저수지로, 남쪽 용두산의 물줄기를 가두어 만든 수리 시설이다.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아 주며 제 역할을 다해 온 의림지는 제천의 자랑이자 충청도의 핵심이다. 충청도를 호수의 서쪽이라 하여 ‘호서지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호수가 바로 의림지다. 의림지는 역사와 명성만큼이나 아름다움도 남다르다. 의림지 제방을 따라 수백 년 묵은 노송과 전나무, 버드나무 등이 어우러져 자란 제림(堤林)은 그 자체로 절경을 이룬다. 멀찍이서 보면 한 폭의 산수화가 되고, 안을 거닐면 제 아무리 진경산수화여도 이를 완벽히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림지는 사계절 내내 제 몫의 빛을 발하지만, 겨울철 눈 내린 의림지를 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명승 제20호인 이유가 납득이 된다.

눈은 의림지 위에 소복이 쌓이기보다는 잠시 머물다 간다. 그래서인지 조금 쓸쓸하지만 그 때문에 수수하게 빛난다. 단 한 사람의 발자국도 남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소박한 정경. 의림지는 우리에게 자연의 전부를 선물한다.



배론성지(이미지 출처: 휴잇제천 홈페이지)

아름다움 이면에 서린 역사의 아픔

제천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도 생을 함께한 의림지에는 아픔이 남아 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의림지 확장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준설토가 한 곳에 쌓여 만들어진 ‘의림지 섬’이 바로 슬픔의 역사를 보여 주는 곳이다. 마치 제림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청명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의림지 주변 어디에서나 눈길을 끌지만, 사실은 쓰러린 아픔이 남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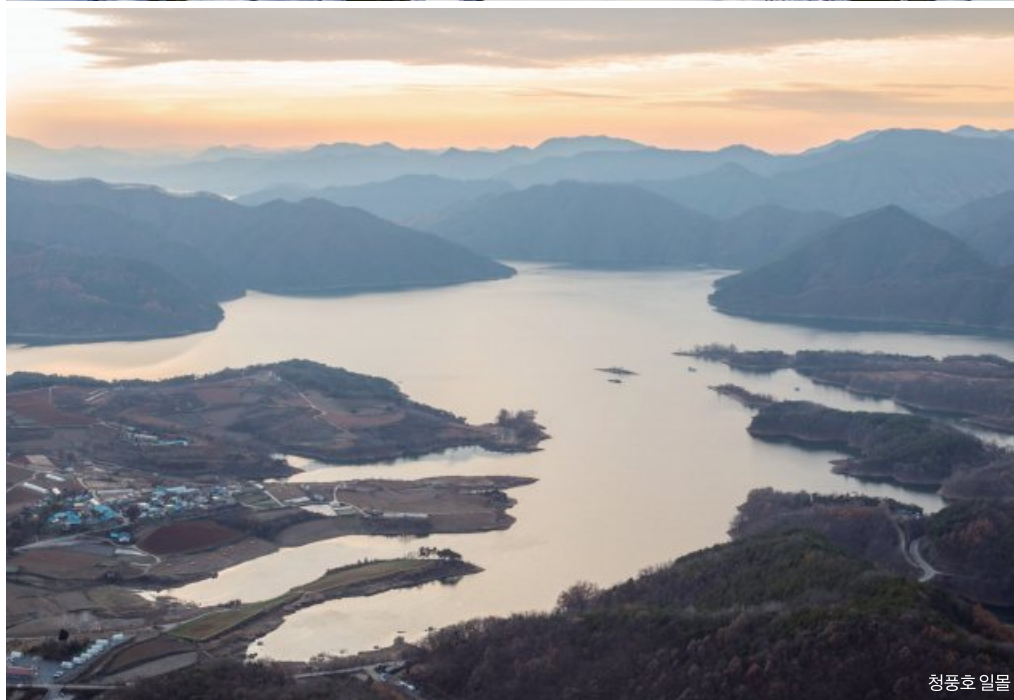
이제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배론성지도 실은 고통 위에 형성된 곳이다. 조선시대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에 모인 것이 그 시작이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계절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곳으로 유명해진 배론성지. 이제는 너나없이 문을 두드리는 이곳은 신앙심을 버리지 않았던 신자들의 강단으로 축조된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땀의 순교자’라 불리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묘와 한국 최초 서양식 신학교인 성요셉 신학당 등이 있는 역사의 산실이다. 배론성지를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종교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배타적 신념으로 인해 차별받았던 이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석양빛에 잔잔히 젖어 든 청풍호

역사는 결코 아름답기만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역사가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천은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곳이다.

부드러운 산세가 겹겹이 둘러져 있는 청풍호는 제천의 대표 명소로 자연 경관을 느끼기에 탁월하다. 그런데 이곳의 공식 명칭은 사실 충주호다.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호수로 충주뿐 아니라 제천, 단양 등의 일대까지 아우르고 있는데, 사실 충주댐 완공 당시 제천의 수몰 지역이 상당했기에 제천은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청풍명월’에서 이름을 따 ‘청풍호’라 부른다. ‘청풍호’는 그 이름에 걸맞은 풍광을 자랑한다.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뜨는 곳. 일몰이 바람을 타고 오듯 하늘은 석양빛에 잔잔하게 젖어 들고, 곧이어 해가 저물면 까만 밤하늘마저 찬란한 달빛에 물든다.

게다가 청풍호에는 모노레일, 케이블카, 번지점프 등 신나는 재미도 가득하다. 울겨울, 장관을 이루는 자연 속에서 나의 열기로 추위를 녹이는 색다른 즐거움을 누려 보는 것은 어떨까.



청풍호 일몰

TIP '미식도시'로도 유명한 제천의 명물은 단연 '빨간오뎅'이다.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진 '빨간오뎅' 한 입에 뜨거운 국물을 호로록 마시면 겨울 추위는 단숨에 사라진다.

새해의 희망을 연주하는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예술의 나라 오스트리아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이하 빈 신년음악회).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1월 1일 오전 11시 15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빈 신년음악회를 진행한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 송출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이 음악회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 보자.

글. 임산하



위로와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

빈 신년음악회의 출발점에는 1939년 12월 31일의 송년음악회가 있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고, 다음 음악회는 1941년 1월 1일 신년음악회로 진행하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빈 필하모닉이 건넰던 위로는 이제 희망이라는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언제나 앙코르 연주로 빠지지 않는 곡이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An der schonen, blauen Donau)’와 그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Johann Strauss I)의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 Marsch)’이다. ‘왈츠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부드럽고도 경쾌한 왈츠 박자를 중심으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했다.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금관악기와 목관악기의 음률 위를 현악기가 잔물결 치듯 연주되는 이 곡은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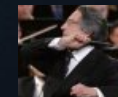
또한 ‘라데츠키 행진곡’은 언제나 대미를 장식하는 앙코르 곡이다. 1848년 북부 이탈리아로부터 영토를 지킨 오스트리아 장군 ‘라데츠키’의 ‘행진’이라니, 제목에서도 웅장함이 느껴진다. 이 곡이 시작될 때 지휘자는 관현악단이 아닌 객석으로 몸을 돌리고 청중들은 약속한 듯 곡의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며 공연을 관람하기 시작한다.

잔잔하고도 성대한 두 앙코르 곡은 ‘희망’이라는 단어와 닮아 있다.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디딘 빈 필하모닉

빈 신년음악회의 또 다른 매력은 공연장에 있다. 빈 신년음악회는 현재 세계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으로 불리는 무지크페라인(Musikverein) 황금홀에서 진행되는데, 건물 외부의 경건함과 내부의 화려함은 1월 1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소망’과 ‘활기’와 잘 어울린다. 또한 공연장 내부의 눈부신 샹들리에와 다채로운 생화는 빈 신년음악회의 생동감을 배가시킨다.

그 생동감은 객원 지휘자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빈 필하모닉은 상임 지휘자 없이 객원 지휘자를 모집하여 늘 색다른 선율을 빚어낸다. 이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자리가 늘 유럽계 백인을 위해서만 열려 있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인도인, 일본인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변화가 싹트기도 했는데, 모두를 위한 음악인 만큼 그 경계가 지워지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음악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기 때문이다.



CONCERT INFORMATION

2022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매년 메가박스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다.

온고지신의 술 막걸리

‘아재술’이라 불리던 막걸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통과 발전의 조화를 통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막걸리. 막걸리의 변신에 주목할 때다.

글. 임산하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

막걸리가 변화하고 있다. 토속적인 이미지를 특별함으로 탈바꿈해, 전통성에 현대성을 접목한 주류로 한 걸음을 내디딘 막걸리. 막걸리에게는 ‘온고지신의 술’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아는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MZ세대의 정서와도 들어맞는다.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변화’에 주목한다.

막걸리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MZ세대였다. 이른바 ‘힙해진 막걸리’에 관심을 보이며 당당히 소비 주체로 떠오른 그들은 자연스럽게 막걸리의 변신에 불을 지폈다. MZ세대의 흥미를 끌기 위해 더 다양한 양조장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색적인 막걸리를 내놓기 시

작했다. 스파클링 막걸리의 포문을 연 ‘복순도가’에 이어 ‘술샘’은 ‘술 취한 원숭이’라는 이름의 붉은색 막걸리를 출시했다.

다양한 협업 상품도 눈에 띈다. 국순당과 크라운 제과의 ‘쥬리퐁당’, 한강주조와 곰표의 ‘표문 막걸리’가 대표적인 예이며, 지평양조는 셰이크백과 함께 막걸리 셰이크를 한시적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단단한 전통 속 특별한 변화

막걸리의 변화는 맛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서울탁주는 라벨에 특별한 디자인을 입혀 ‘인생 막걸리’를 출시했다. 여러 세대를 겨냥한 3가지 라벨은 소비자에게 막걸리를 고르는 재미를 주었다.

막걸리를 즐기는 장소도 진화했다. ‘막걸리 바(bar)’의 등장은 막걸리의 이미지를 전복시키

기에 충분했고, 토속적인 분위기가 아닌 우아하고 현대적인 공간에서 마시는 막걸리는 많은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어쩌면 막걸리를 바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막걸리 양조장마다 맛과 디자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왔고, 앞서 이러한 시도에 대한 좋은 성과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막걸리의 변신에 힘입어 막걸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 5,000억 원대로 성장했으며,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MZ세대의 막걸리 구입 비중이 최근 3년 새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이라는 단단함 속에 변화라는 특별함을 가미한 막걸리. 튼튼하게 뿌린 내린 뒤 내뻗은 가지는 그 또한 튼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막걸리의 변신이 기대되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_ 술샘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_ 한강주조 홈페이지

어김없이 2021년의 마지막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자신의 속도로
맹렬히 나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은 떠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추억을 선물하고, 기억을 안겨 줍니다.

어제의 기쁨을 나누고 오늘의 만남을 즐기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해 봐요.
당신만이 당신의 시간을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올겨울,
이 시간이 당신에게 특별해지길 바랍니다.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고급 리무진으로 공항(자택)까지 전문기사를 통한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이용 가능 지역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시흥, 김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 부천, 고양, 일산, 구리, 하남),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 웨딩카 지원 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웨딩카로 식당에서 공항까지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및 이용 가능 지역은 공항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동일

✎ 작명 서비스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이름, 회사·건물명 작명 제공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의 직계비속(신생아 및 입양), 고객 명의의 회사·건물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 경조사 서비스

상 또는 결혼이 발생한 고객에게 결혼 시 축하 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